

社說

국힘 '윤 어게인' 반대 결의 채택, 당 정상화 계기로

국민의힘이 9일 의원총회에서 “잘못된 계엄 선포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확히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 노선 변화를 요구하며 후보 등록을 보류하자 긴급 의총을 열고 장동혁 대표가 옹호해 온 ‘윤 어게인’ 세력과의 단절을 선언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가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이 당연하고 상식적인 말을 내놓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의원들은 “지난 총선은 윤 전 대통령이 맞았는데, 이번 지방선거는 장 대표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대로면 수도권에 후보도 못 내고 빨간 옷 대신 흰 옷 입고 다녀야 한다”며 장 대표를 압박했다고 한다. “부정선거는 없다고 장 대표가 직접 밝히라”는 요구도 나왔지만, 이 부분은 결의문에 들어가지 않았다. 앞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날 결의문은 ‘의원 일동’ 명의로 장 대표도 포함됐다. 하지만 장 대표는 회의 내내 말이 없었다고 한다. 의총 후 박성훈 대변인이 “장 대표는 의원들의 총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선거를 앞둔 정상적인 야당이라면 정권을 빼앗긴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을 쇄신해 국민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런데 장 대표는 정권을 내준 원인을 제거하기는커녕 고수하겠다고 해왔다. ‘윤 어게인’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편승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은 징계에 회부하고 제명했다. 그사이 당 지지율은 곤두박질쳤다.

이날 결의문은 국힘이 정상화로 가는 시작일 뿐이다. 결의문이 채택됐어도 장 대표가 이를 당 운영에 반영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국힘의 변화를 국민이 믿을 수 없으려면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한동훈 전 대표처럼 징계 또는 제명당한 사람들의 지위를 원상 회복시키는 것이 그 시작이다. 또 앞으로 누구든, 어떤 경우에서든 ‘윤 어게인’이나 부정선거 음모론을 옹호하는 언행이 나와서도 안 된다. 그런 일이 생긴다면 결의문은 눈속임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날 것이다. 반대로 국힘이 그간의 퇴행을 끊고 새로 태어났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바뀐다면 국민의 시선도 달라질 것이다. 그래야 집권 세력의 폭주를 견제할 동력도 생길 수 있다.

초유의 유가·환율 동시 쇼크, 경제 위기급 대응 나서야

이란 사태 장기화 우려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다.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를 차지하는 에너지 대동맥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쿠웨이트·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산유국들이 갑작스럽게 유가는 일주일여 만에 50% 넘게 급등했다. 고유가 쇼크로 9일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 선에 육박했고 코스피도 6% 급락했다.

석유화학·반도체 등 실물 경제 충격도 가시화되고 있다. 국내 최대 에틸렌 생산 공장인 여천NCC는 고객사에 필요한 물량을 제때 납급 수 없다고 통보하며 공급 중단을 선언했다. 웨이퍼 냉각에 필수적인 헬륨 수입량의 64%를 카타르에 의존하고 있는 반도체 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한국 경제는 크고 작은 위기를 수없이 겪었지만, 이번처럼 고유가와 고환율이 동시에 발생한 것은 드물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환율이 1500원을 넘었지만, 세계 경기 침체로 원유 수요가 감소하면서 유가가 40달러 수준으로 떨어졌었다. 고환율 충격을 저유가가 상쇄해 준 것이다. 반면 유가가 100달러를 넘었던 2011년과 2022년에는 환율이

1100~1200원대로 안정됐다.

에너지 자급률이 19%에 불과한 현실에서 고유가와 고환율은 고물가·저성장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넘었을 때 국내 소비자물가는 5.1% 급등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2%로 전망했는데, 이는 브렌트유 가격 64달러를 전제로 한 것이다. 씨티은행은 브렌트유 가격이 50달러 급등하면 한국 성장률이 1.07%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올해 성장률이 정부 목표치(2%)보다 한참 낮은 1%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란 사태가 조기 종결되면 최선이었지만, 중동 정세는 한국이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에너지 수급 안정과 물가 관리, 외환시장 안정, 취약 산업과 계층 지원 등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부 방어벽을 높이는 것이다. 정부는 현 상황을 2008년 금융위기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문 총력 대응 체제를 갖춰야 한다. 정부의 빠른 대응이 절실하다.

온갖 불확실성 그대로 둔 채 시행하는 노란봉투법

노사 관계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 것이라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은 사용자 범위, 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의 범위,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 등 많은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이라 선례도 없고 참고할 만한 법원 판례도 몇 건 밖에 없어서 시행착오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노조는 법 시행 전부터 자신의 직장인 하청 업체가 아니라 원청 업체와 노사 협상을 하겠다는 요구를 불붙처럼 쏟아내고 있다. 대기업은 괴롭혀야 이득이 크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원청을 상대로 투쟁할 것이라 예고했다. 민주노총이 겨냥하는 기업은 원·하청 구조가 광범위한 자동차, 조선, 건설 업종이다. 하청 노조 몫이 늘어나면 자기 몫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어떻게 나올지도 걱정이다.

노동계는 물론 정부도 노란봉투법 안착을 위해 대기업에 적극적으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러

나 경영계는 한번 하청 노조와 교섭에 응하면 계속 대상이 늘어나 자칫 1년 내내 교섭에 시달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가 시행령과 해석 지침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빈틈이 너무 많다. 노사 모두 가보지 않은 길에 들어선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제한했다.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어느 것 하나 명확한 것이 없어 노사 모두 소송으로 해결하려고 할 가능성도 커졌다. 만약 기업 현장에 파업과 소송이 난무하면 노사 모두에게 피해가 된다.

중동 불안으로 해외 경영 환경이 악화한 상황에서 국내 노사 관계마저 흔들리면 경제에 주는 타격도 적지 않을 수 있다. 노동계가 무분별한 요구가 아니라 절제를 보여야 한다. 정부도 노란봉투법을 적용하는 단계부터 일반적으로 노조 편만 들지 말고 최소한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빠른 시일 내에 노란봉투법을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해야 한다.

‘여의도·총정로 권력’은 없다



표와 원팀을 이루며 ‘총정로 대통령’으로 통했지만 조국혁신당과 합당 문제로 역풍을 맞았다. 대통령 지지 그룹인 ‘뉴이재명’은 김씨를 ‘수박’으로 비하하며 ‘탈(脫)어준’을 외치고 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고공 행진 중이다. 연일 ‘SNS 메시지’로 여론을 움직이고 정국을 이끈다. 보수층 일각에서도 “잘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스피 5000 목표를 이뤘고 부동산도 안정세로 돌아섰다. 미·중·일 관계도 나쁘지 않다. 야당은 내부 혼란을 수

‘明心 인증’ 후보들 줄줄이 공천 정청래·김어준 파워 역풍에 퇴조 친명 재집권 위한 ‘F8 경쟁설’도

이 대통령에게 친명 정권 재창출은 중요한 과제다. 퇴임하면 중단됐던 5개 재판이 재개된다. 재판소원과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 등 사법 3법 강행과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도 이 때문이다. 정권을 뺏겨진 퇴임 후 안위가 위협해진다. 재창출된 정권이 이 대통령과 각을 세우도 안

된다. 믿을 수 있고 통제 가능한 친명 후계 구도가 필요하다. 레임덕을 막고 국정 장악력을 유지해야 한다.

여권에선 “친명 정권 재창출과 30년 집권을 위해 ‘F8(핵심 8인방) 경쟁 체제가 뜰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기존의 ‘정청래 vs 김민석 총리’ 대결 구도에 송영길 전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강훈식 비서실장, 박찬대 의원, 정원오 구청장, 조국 대표 등이 가세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97년 ‘신한국당 9룡(龍)’을 연상시킨다. 여권 관계자는 “임기 후반까지 2인자를 두지 않고 여러 주자 간 총성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뜻 같다”고 했다.

이번 선거에서 이기면 이 대통령은 입법·행정에서 지방 권력까지 한 손에 쥐게 된다. 사법 3법으로 사법부도 사실상 무력화 단계다. 야당은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강력한 내부 견제 세력이었던 ‘여의도·총정로 권력’도 퇴조세다. 이 대통령은 2028년 총선까지 절대 권력을 행사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민주화 이후 어느 정부도 갖지 못한 힘이다.

하지만 절대 권력은 득보다 득이 된 경우가 많다. 견제받지 않으면 폭주하고 부패하기 쉽다. 과도한 자신감은 독선으로 흐를 수 있다. 퇴임 후 안전 보장을 위해 국정 에너지를 정적과 반대파 없애기에 쓰려는 유혹도 커진다. 여권의 힘은 지금도 과도하다. 입법 폭주와 전횡이 매일 되풀이된다. 그 힘이 더 강해지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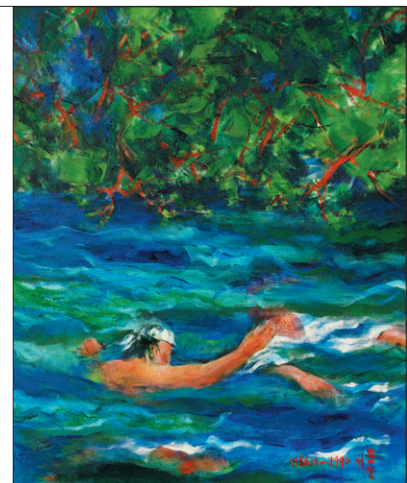
우정아의 아트 스토리 [622]

영월 청령포의 단종

빠른 물살에 속절없이 떠내려가는 이가 있다. 숙부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고작 열여섯 나이에 유배지에서 죽음을 맞은 단종이다. 흰 옷소매 아래로 손이 나와 있으나 얼굴은 물속으로 가라앉아 보이지 않는다. 종일장처럼 가볍게 흘러지는 어린 왕의 시신을 붙잡으려 거침없이 헤엄치는 남자가 있다.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자, 삼죽을 멸한다는 세조의 엄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물에 뛰어든 영월의 호장 엄홍도다. 영월 ‘왕과 사는 남자’가 천만 관객을 울리자 전부터, 화가 서용선(1951년생)은 이처럼 단종 그림에 천착해 왔다.

서용선은 1986년 청령포를 처음 방문해 거기가 바로 단종의 유배지였음을 알게 됐다. 험한 산을 뒤에 두고 삼

면이 강물로 둘러싸여 지금도 쉽게 드나들 수 없는 청령포를 두고 서용선은 “어떻게 인간이 이런 자연을 찾아내어 사람을 보낼 생각을 했는지 놀랐다”고 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화가는 강물에 시신이 떠내려가는 환경을 보는 강렬한 경험을 하게 된다. 당시 그 또한 여러 괴로움을 겪고 있어서 그랬을까. 기막힌 풍경 앞에서 역사 속 비극이 더욱 생생하게 다가왔던 걸까. 아니면 죽어서 태백산으로 올라가 산신령이 되었다는 단종의 혼령이 보여준 것일까. 영문을 알 수 없어, 어쨌든 서용선은 그 뒤로 수십 년간 계유정난을 비롯하여 단종을 둘러싼 여러 사건과 인물을 치밀하게 조사하고 관련 장소를 답사하면서 수많은 그림을 그렸다.



서용선, 엄홍도·청령포·노산군, 1986~1990년, 캔버스에 유채, 85×70cm.

혹자는 이를 ‘역사화’라고도 하지만, 단종은 오히려 역사에서 애써 지워졌던 인물이다. 서용선의 단종 그림은 그보다는 권력에 대한 욕망과 그로 인해 생겨나는 슬픔을 화가의 내면을 통해 형상화한 결과물이라고 하겠다. 포스트백 교수·서양미술사

일본-독일은 중단... 정은경은 강행, 왜? 《가짜 K-방역 영웅》 정은경 사퇴하라 ... 국민이 ‘실험용 쥐’였나? 뉴데일리 newdaily.co.kr

오염 백신 1420만 회분 ... 단순 계산으로 국민 4명 중 1명꼴 | 접종 후 사망 2802건 ... 이상반응 신고 48만 5567건 | 우파 정권 잘못이었다면 ... 훗날-헛발 난리 났을 것

뉴데일리의 문제 제기

국민의힘 나경원 신동욱 박규택 송석준 조배숙 주진우 의원은 코로나 오염 백신 관련,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백신 접종 당시 질병관리청장이었던 정은경 현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도 촉구했다. 법사위는 열리지 못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나경원 의원은 직격탄을 날렸다. “정은경 전 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입국단》하며 권력의 정점에 있다. 국민 생명을 담보로 도박을 벌이고, 국민 희생을 《K-방역》이란 정부 성과로 포장하며 국민을 기만했던 주역이 누구의 건강을 책임 진단 맡았는가? 즉각 사퇴해야 한다.”

갑사원의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다. 일부 백신에 곰팡이, 머리카락, 이산화규소(실리카) 등 각종 이물질이 포함된 사실이 발견됐는데도, 동일 제조번호 백신 약 1420만 회분을 국민에 접종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 계산으로 국민의 약 25%가 오염 백신을 맞은 셈. 정은경의 질병관리청은 접종을 중단하지 않았다. 일본과 독일은 문제의 백신을 전량 폐기하고 접종 보류를 결정했다. 너무나 대조적이다.

“방역 시스템을 지휘하고 《방역 영웅》으로 칭송받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현 보건복지부 장관의 책임론이 떠오르고 있다. 왜 일본과 달리 접종 중단 결정을 내리지 않았는지, 왜 절차를 무시하고 제조사 답변에만 의존했는지 자초지종을 밝혀야 한다.” - 뉴데일리 박근빈 보건의료 전문

가짜, 《곰팡이 백신 강행한 질병청, 국민은 ‘실험용 쥐’였나》

가짜, 《곰팡이 백신 강행한 질병청, 국민은 ‘실험용 쥐’였나》

오염 백신 마구잡이 접종 피해와 후유증

코로나 사태 당시 문재인 정권의 대한민국에는 전체주의적 분위기가 팽배했다. 접종 거부 국민에게 군국주의 일본 시절의 《(非)국민》을 연상시키는 듯한 낙인까지 찍었다. 《문지마 백신》의 부작용과 후유증은 너무나 컸다. 국힘의 지적, “백신 접종 후 사망 2802건, 이상반응 신고 48만 5567건.”

법원도 코로나 백신 접종과 급성 심근경색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정부의 보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백신 접종 후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공무원 A씨의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문재인 정권 시절 《현장대응 인력 우선 접종 대상자》로 분류돼 백신을 맞았다. 접종 열흘 뒤 A씨는 숨졌다.

정은경의 영터리, 문재인도 책임자야

1965년 광주 출신 정은경은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 질병관리본부장에 임명된 뒤 질병관리청 초대 청장으로 승진, 2022년 5월까지 재직했다. 문재인 정권 코로나 방역 핵심 중의 핵심이다. 윤석열 정권 출범 후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병정액연구위원-서울의대 가정의학교실 기금교수를 거쳐 이재명 정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 기용됐다.

정은경을 띄우는데 앞장섰던 문재인은 큰소리 쳤다. “백신접종은 안심해도 된다.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정부가 책임지고 보상하겠다.”

오염 백신이 마구잡이로 국민들에게 접종됐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거의 반강제적 의무사항이었던 문재인 정권 아래서 벌어진 일이다. 오염 백신이 발견되자 일본과 독일은 중단했다. 정은경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 제미니이

김정일에 엄청난 돈을 퍼주었던 김대중을 떠올리게 한다. 김대중은 호언장담했다. “북한은 핵을 개발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내가 보장한다. 후시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북한의 핵 위협은 진행형이다. 책임지겠다고 김대중은 이 세상에서 없다. 문재인은 자신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럼 문재인 개인의 책임은 없는 것인가.

정은경 해임과 국회 국정조사, 즉각 해야

정은경의 의혹과 논란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질병청장 재직 시, 그녀의 남편은 손소독제 원료회사 등 코로나 관련 주를 추가 매입해 《이해충돌》을 불러일으켰다. 장관 청문회 당시 정은경 부부의 연간 지출액이 약 662만 원(월 55만 원)으로 비정상적으로 낮았다. 남편 보유 일부 주식 내역이 과거 고위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됐다. 정은경이 청장 시절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했던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병정액연구위원으로 옮긴 것을 두고 《대가성 취업》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국힘은 청문보고서 채

택을 거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장동혁 국힘 대표는 정은경의 해임을 촉구했다. “정은경 장관은 불량 백신 카르텔의 장본인으로 손세탁제, 마스크, 코로나 진단키트 등 코로나 수혜기업에 투자했다는 의혹도 있다. 즉각 해임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 모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장 대표의 페이스북, “백신 테러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가 그것이 밝혀졌는데도 이재명 대통령의 X(옛 트위터)는 잠잠하다. 야심찬 새벽에도 폭풍 같은 글을 올리던 대통령은 어디로 갔나.”

문재인이 치켜세운 정은경, 《K-방역 영웅》은 커녕 《가짜 방역 영웅》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안면물수하고 버틴다면, 이 정권 눈엔 국민은 없다고 봐야 한다.

오염 백신 사태는 지지정당-출신 지역에 관계없이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이다. 이 사안이 우파정권에서 빚어졌다면, 언론-시민단체 모두 들고 일어섰을 것. “이게 나라냐”고.

《가짜 K-방역 영웅》 정은경은 즉각 물러나라.

권순환 객원 칼럼니스트
권순환TV 대표 /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6년 3월 8일 게재 되었습니다.